

기윤실 포럼

한반도 평화, 기독교 안팎의 과제

일 시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100주년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

공동주최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발행일 | 2018년 10월 4일(목)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편 집 | 박제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3130 Wilshire Blvd. #410.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87-1207 팩스 213-487-7521

홈페이지 lacem.org 이메일 email4lacem@gmail.com

순서 및 목차

사회 : 이상민 (사)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7:30~7:40

인사

7:40~8:30

발제 : 한반도 평화, 기독교 안팎의 과제 /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4쪽

8:30~8:40

논찬1 / 박문규 LA기윤실 대표 22쪽

8:40~8:50

논찬2 / 조주현 LA기윤실 사무국장 26쪽

8:50~9:00

논찬3 / 정병오 (사)기윤실 공동대표

9:00~9:30

토론 및 질의응답

한반도 평화, 기독교 안팎의 과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I. 서론 - 민주평화의 선구자에서 반평화반민주까지

교리는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거의 교리 해석권자들과의 갈등으로 점철돼 있었고, 그들의 해석이란 것이 기독교 수호를 목표로 했으니 논리적으로 허약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에 의해 선동된 대중들에 이르면 로마 제국법과 유대법이 그냥 뒤죽박죽이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조작된 여론은 빌라도의 정치적 욕망과 어우러져 결국 기독교의 방해물인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는 목표를 이뤘다.

생명과 죽음이 모두 신자들 내부에 있었기에 그런지 몰라도 한반도의 갈등과 화해도 교회 안에 있다. 한국 교회는 일제 하 신사참배와 분단의 책임을 스스로 고백했으며, 80년대에 들어서 남북 교류의 실낱같은 시작도 그 목사와 교인들이 맨 앞에 있었다. 물론 그 때나 지금이나 평화는 고사하고 만남 자체에 반기를 드는 교회와 교인들은 상당하고, 계속 재생산된다.

따라서, 진정 평화를 바라는 동시대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함에 있어 사랑과 평화라는 꺾대를 벗어나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평탄할 수가 없다. 거의 심리전을 벌이듯 전개되는 반민주, 반평화 세력의 뒤편이 있고, 그들도 ‘교회’안에 있기 때문이다.

II. 성도와 시민의 공동목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12:18) 하신 말씀을 남북미 3자를 위시한 동아시아 행위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의 현실적 목표는 남한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할 만큼의 동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스탠스에 합의하며, 북은 수십 년 스스로를 옥죄고 한반도를 긴장시켜 온 대결의 족쇄를 벗는 것이다. 이 때 북의 평화와 ‘변영’이라고 이름붙여진 경제적 위기탈출의 프로세스는 남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바람직하다.

3자 중 미국과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정체(政體)다. 풀어서 말한다면 자유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도가 정치권력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양국의 시민사회는 자유주의의 실패를 최소

화 하면서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부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휴전선 분단(1953) 이후 65년 중 얼마나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했을까. 같은 기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행사하는 영향력만큼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을까. 미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의무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나 있을까.

III. 평화 만들기의 현실

이상 혹은 이상주의자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늘 ‘비 이상적’이다. 남북한의 거민들은 ‘변영’에 추동되고, 미국은 ‘국익’ 혹은 정파적 득실에 추동된다고 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평화주의자들은 대중들 가운데 막연히 만연한 ‘변영’의 욕구가 반평화를 그 쪽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고, 미국의 국익 개념을 조절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다. 국내적으로 ‘안보와 변영’을 ‘평화와 변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을 협력적 공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대결과 불안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평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융성을 새로운 기회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익의 카르텔이 군산복합체에서 여타의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 전환 사이에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죽음의 계곡’이 존재할 것인데, 그 건너편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조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곡을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넘어가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 그러한 신념이 미약한 대중들과 정치인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역할’을 먼저 고찰해야 하므로, 그간 한반도에 벌어진 평화 만들기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장기 미해결 구조

1945년 38° 선을 기준으로 최초의 한반도 분할 이후 73년, 6.25전쟁에 의해 군사분계선 확정¹⁾ 이후 65년, 분단을 유발한 국제적 환경인 마소 냉전이 해소된 지 29년²⁾, 일제강점기³⁾ 이후 108년이 흐르고 있다 (2018년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첫 행보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 이후로도 18년이 흘렀다. 어떤 사회문제가 7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거나 진전이 없다면, 필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 혹은 쓴 뿌리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들은 하나의 ‘생태계’와 흡사한 구조를 가졌기에, 여러

1) 1953년 7월 27일 정전조약

2) 1989년 12월 몰타 마·소 정상회담(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에서 “동서가 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냉전 체제는 선언적으로 막을 내렸다. 1991년 12월 25일 양극 체제의 일방인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형해화 되었다.

3) 일제 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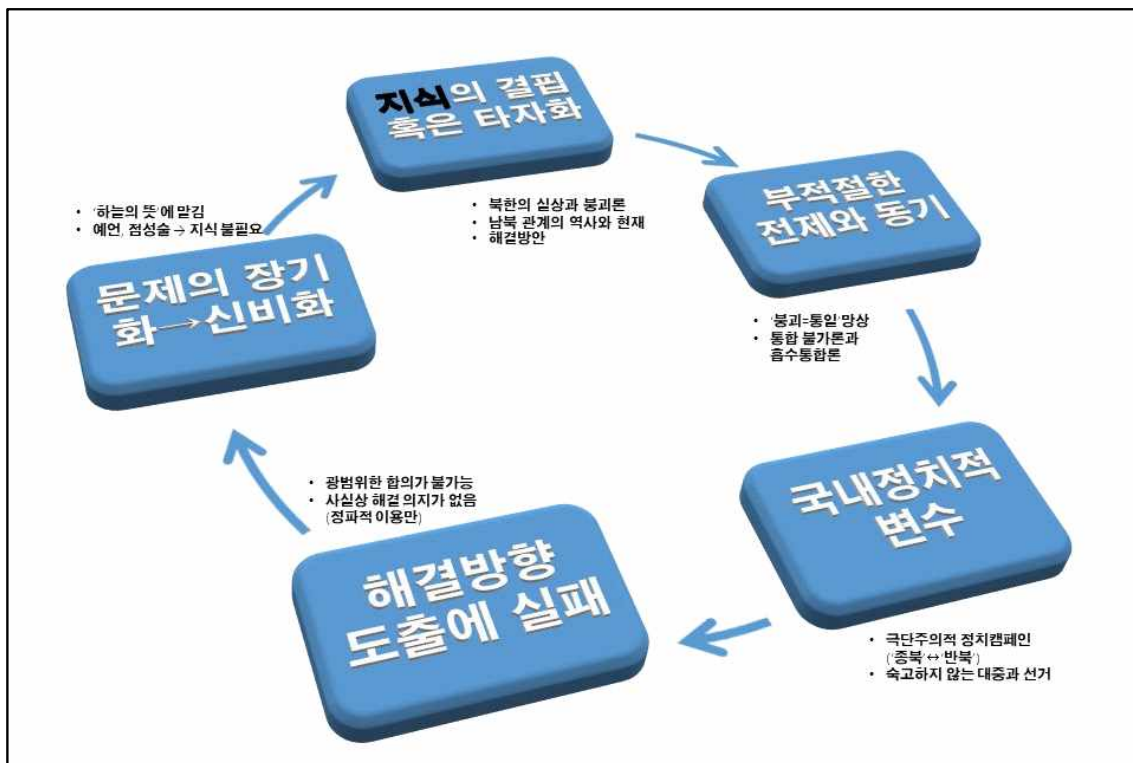
세대에 걸쳐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악순환 고리의 정점에 ‘지식 결핍’이 있으리라고 의심한다. 지식의 결핍이 사회와 교회에서 운명론으로 전환되면서 일종의 메타 지식(Meta Knowledge)이 되었고, 지식 무용론에 가까운 의식구조를 추정한다.

예컨대, “지구상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라는 언술은 한반도 거민들의 과제를 일깨우는 듯 하면서도 숙명론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분단과 (재)통합은 세계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치적 정상상태(正常狀態)다. 분단이나 분열로 인해 인간에게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당대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보고 해결을 위해 파고들면 될 일인데도, 지정학(地政學)과 유사한 논의가 더해지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유통되는 것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 핵실험 등 남북미 대결상태가 부각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말 대잔치’에 가까운 대중적 흥분과 유사 지식의 과잉상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지식의 결핍을 시사한다.

발제자가 추정하는 지식 결핍의 악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남북문제의 장기 미해결 구조

적대적 통합 의지를 감추지 않는 남북은 상호관계, 상대의 실체와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억압한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정보기관에서 생산된 문헌이나 미국, 일본 등 남북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신진 학자들이 일종의 ‘지식 따라잡기’에 들어가서 어지러운 지식 생태계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은 2000년대 이후였고, 그 전에 생산·유포된 ‘가짜 김일성’론, 남한 정부의 주권 범위에 대한 오해, 북한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망상은 지금까지도 덜 교정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그림1]에 ① ‘지식의 빈곤’으로 표시하였다.

현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구조로서의 지식도 절실한데, 지식의 빈곤은 ② ‘부적절한 전제와 동기’를 형성한다. 특히, ‘북한이 붕괴할 것이며, 그럴 때 남한 정부의 주권이 한반도 전역에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은 분단의 일방인 북한과 애써 대화하거나 교류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조차 좌악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잡아야 할 지식들중 아래와 몇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정부(1948.5.10선거에 의해 구성)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수립되었으나 그 주권범위는 선거를 치른 38° 선 이남 지역이다.⁴⁾ ‘합법’(lawful)이라는 표현은 어떤 국내법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주권이 창출되는 국제규범을 따랐다는 의미다. 1950년 10월 이승만 정권의 북한 점령지역 통치계획은 미국과 UN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북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도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민심)’가 핵심 문제임을 시사한다.⁵⁾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1948 최초 헌법 제4조)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통일을 지향’한다는 제4조(88년 개정)와 상호 모순되고(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제4조가 우선)있어, 현재는 제3조를 하나의 상징조항으로 해석하는 판례를 남겼다. 더 근본적 문제는 하나의 정체(state)로 수립된 적이 없는 일방의 헌법으로 타방의 영토를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속지주의(屬地主義) 국적제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탈북민들의 시민권 부여는 영토 문제와

4) 김계동,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 명인문화사, 2012), p. 207; UN총회 결의문 ‘195 (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1948. 12. 12 ;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오자나 띄어쓰기도 그대로 전재함.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론은 이승만 정권이 오역한 것임.

5) 동독 역시 인민회의 선거(1990.3.18)에 의해 대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가 서독에 편입되는 방식을 합의한 후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주권이 확보되었음.

직결되지 않는다.

○ 1991년 9월 남북은 동시에 UN회원국이 됨으로써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이다.⁶⁾

부적절한 전제와 동기는 ③‘국내 정치적 변수’로 작동한다. ‘종북’이 아니면 ‘반북’밖에 없는 극단적 정치성이 형성되고 대중들은 북한을 실제로 인정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정파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국내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답을 기준으로 ‘진보’, ‘보수’, ‘중도’가 갈리기도 한다.⁷⁾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을 집권해 온 이른바 ‘보수’세력은 스스로 ‘반북’을 구조화, 내면화 하고 있으므로 해결방향 도출에 실패하거나, 그런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 헌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 명분 획득이 사실상의 목표가 된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통일 대박’과 같은 언술이 대표적 사례다.

불안을 동반하는,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장기화되면 일종의 ⑤신비 영역으로 접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교인들이 통일이 더딘 것을 예정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순종)이 수반되었는가에 따라서 ‘믿음’으로 보일 수도, 평화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낯두리가 아니라면 ⑤신비화에 접어든 문제는 이성이나 지식을 덜 중요한 문제로 여기므로 결국 지식 결핍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B. ‘불능’과 ‘속단’의 결합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수적으로 관측하는 경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극명하다. 언제나 약소국이고 침략의 대상이었던 역사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오로지 힘을 기르고 좀 과도해 보이는 군사적 대비태세라고 말하는 일변도의 사고에 늘 안보 현안을 유발하는 북한, 혹은 남북 관계가 원인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론이다. 이는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해도 안되기에 무의미하다는 여론을 형성한다. 과거 언젠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90년대 말 부터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제와 정치외교적 역량은 전 지구적으로 작지 않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결실과 교육 역량의 성장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불능론’이 결합하는 ‘속단’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언술들이

6) 1991년 8월 8일 남북한 UN가입안을 안보리 단일결의로 채택,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 국가기록원; 발제자가 국가기록원의 관련 기록중 오류를 바로잡도록 건의하여 “한국은 161번째, 북한은 160번째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로 시정됨(2012년 10월 12일).

7)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에 대하여 진보(49.1%)>중도(37.4%)>보수(32.0%) 순으로 응답, 출처: 『2012 통일외식조사 발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다. 발제자는 전공 학자로부터 ‘북한 선교’한다는 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직접 들었다. 들을 때마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얻어질까. 이는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 빅터 차(Victor Dong Cha)와 같은 인물들이 내세우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현실주의 정치학 경향을 드러내는 언술이다. 그의 논지는 ‘북한은 과거에도 안 변했고, 지금도 안 변하고 있으니, 미래에도 안 변한다’는 식의 전형적 비관론 현실론이다. 현실주의 학자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지만 그런 논지로는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체제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핵문제 자체도 ‘비핵화’라는 목표만이 아니라 ‘핵 모라토리엄 선언’, ‘핵 동결’, ‘불능화’와 같은 과정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합이 결과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과 비중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평화적 수단을 폄하하고 군사적 동맹과 무력 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 결과나 기대치를 특정하지도 못하며, 우리의 앞날을 타자에게 의존하는 무책임이다. 그저 해답이 아닌 ‘북한의 붕괴’만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비용과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현상유지 외에는 추구하는 바가 없는 빈곤한 스탠스라고 할 수 있다.

C.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와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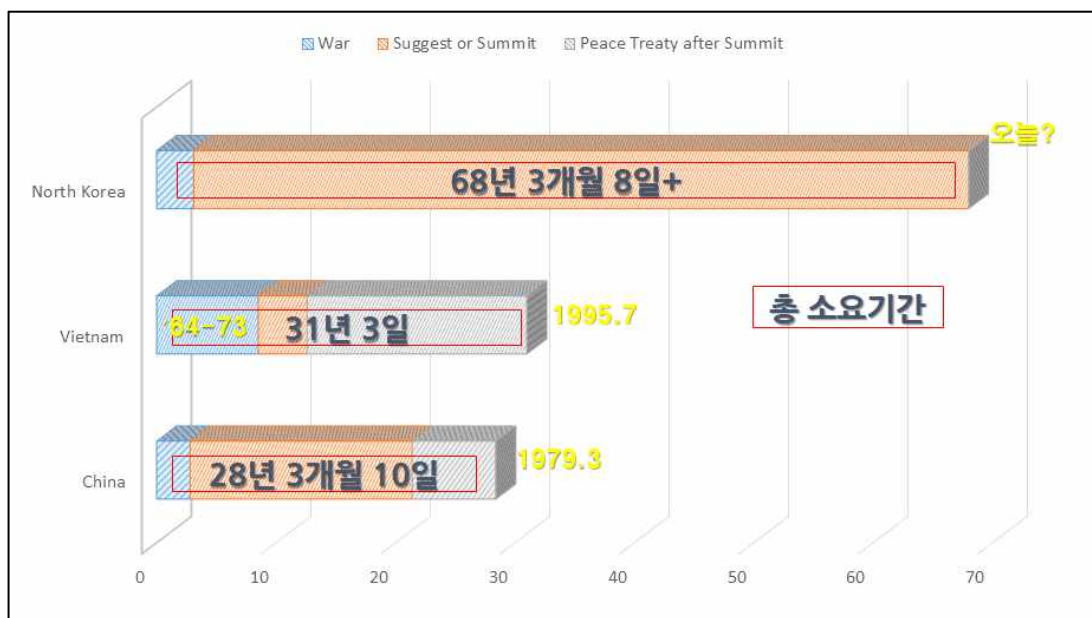
미국은 정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라고 할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거대한 작간접적 영향력을 길게는 1세기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일본 본토, 오키나와, 필리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은 그 땅의 주인들보다 훨씬 강하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Taft-Katsura agreement)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밀어넣는 데 일조했고, 이후 분단, 전쟁, 냉전(=분단 장기화)에 이르기까지 개입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 한반도의 오늘날은 미국의 발자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날 미국인들 중 북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6%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⁸⁾ 위치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과 책임을 인지하는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조야의 북한 인식이 악의 축, 기괴한 나라, 흥미롭고 골치아픈 구경거리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적어도 자신들의 정부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 변화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9일 “88 서울올림픽이 냉전구도 종식과 동서 진영의 화합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음을 내비친 지 열이틀 만인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는 전향적이었고, 미국은 이때도 올림픽을 대북압박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2006년에 탈북한 장애인 지성호 씨를

8)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컨설트가 2017년 4월, 미국인 1천746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욕타임스’ 보도.

자신의 연설장과 백악관에 초청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에서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워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워비어를 ‘특별손님’ 자격으로 대동하고 평창에 와서는 천안함 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펜스 뿐 아니라 이방카도 같은 방, 같은 관람석에 있던 북측 김영남이나 김여정을 애써 외면했다. 야당과 보수언론들이 ‘홍행 실패’ 프레임으로 평창을 깎아내렸지만, 사실 가만둬도 홍행이 어려웠던 평창을 살린 건 북한 변수였다. 세계인들이 경기에 지면서도 애깃거리는 더 많은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북측 선수단(47명 중 선수는 22명)의 8배쯤 되는 응원단과 공연단에 주목하게 됐고, 강릉의 불씨는 서울 공연까지 이어졌다. 이 흐름 속에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고(2.10), 문재인 대통령의 숙고를 거쳐 3월 6일에 답서가 북한에, 북의 대화 의지가 트럼프에게(3.9 한국시각) 전달되고 즉시 수락되는 대반전이 펼쳐졌다.

6.12 북미정상회담(2018 North Korea – United States summit) 자체에 대한 미국 여론의 지지와 그것이 형편없는 트럼프의 지지율까지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을 보면 미국인들도 긍정적 해결 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회담의 성사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과정이 평화구축의 열망과 역량이 집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해 득실로 추동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면서 한반도에서는 평화 프로세스에 발을 들여놓은 격이다. 물론 이 상황도 분단과 적대의 고통 속에 살아 온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이지만, 미국이 교전 상대국과 다시 수교하는 데 걸린 시간들을 하나의 역사적 빅데이터로 꺼내보면 만시지탄이 절로 나온다.



[그림 2] 미국이 교전국과 정상회담(수교제안), 수교하기까지 걸린 시간

□ 위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설명

- 6.25 전쟁의 2/3정도는 미-중 전쟁으로 간주. [전쟁]1950.10.19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中国 人民志愿军) → 1953.07.27. 휴전성립 → 1958년 10월 중국군 완전철수 → 1972.2.21 닉슨 미 대통령 방중 毛泽东(Máo Zédōng)과 [정상회담] → 1976.9.9 마오 사망 → 1979.1.1 덩샤오핑(邓小平) 방미 - [미중수교] 합의(미국은 대만과 단교) → 1979.03.01 양국 수도에 대사관 설립(대사교환) 합의(72.2.21-) ⇒ 1950.10.19.~1972.2.21.까지 총 7,796일
- 미-베트남 [전사(前史)] 1945.9 호치민 독립선언 → 1947 프랑스의 요청으로 미국(해리 트루먼)이 프랑스에 전비를 지원 → 1950.02 미국이 프랑스 지원 바오다이 정부 승인 → 1954.4 제네바평화회담, [전쟁] 1964.8.2 통킹만 사건 → 1973.1.27 평화협정, [수교제의] 1977 년 3월 카터 대통령은 베트남에 관계정상화 문제, 미군 실종자 수색, 미국의 원조제공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 [수교] 1995.8.5 상호 대사관 설치
- 미국이 북한과 오늘(2018.10.4) 수교한다면 68년 3개월 8일이 걸리는 셈이다.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중국이 공산주의와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먼저 회담과 수교를 제안했고 여러 수단과 인내를 발휘해서 성사시켰다.

이런 역사적 빅데이터를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 한결같이 ‘왜?’ 그랬냐는 반문이 돌아온다. 중국과의 수교는 소련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베트남과의 수교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인도차이나 라인에 적대국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 편에서 핵심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다. 어떤 전환도 전략에 의해 추동된다고 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로 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미국은 대북관계가 아니라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을 것이고 적대의 세월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IV. ‘분단’의 해석과 한반도 선교 패러다임⁹⁾

분단 이전 세대에게 분단은 ‘당한 일’일 수 있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해석의 대상이고, 해석의 목적은 적절한 질서의 추출이다. 적절한 질서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 교회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인식적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통상 ‘북한선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9) 이하는 ‘선교한국’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A. 자타(自他) '협동체' 관점

선교계는 선교 패러다임에 있어 '국내↔해외'라는 지리적 구분을 넘어서서 '동일문화권↔타문화권'이라는 더 나은 구분을 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일방(一方)인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도 이 구분들이 유효한가? 기존 이론들이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라 표현해 왔는데, 이는 학술적인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비단 선교이론이나 신학만의 결여가 아닌 것이다. 본 글 '정권과 교회의 대북인식'에서 정치적 논리에 교회의 스탠스가 동기화 하는 현상처럼 분단 체제에 대한 정치학의 정리가 매우 허약한 것이 여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70년 이상 두 국제 체제(the two Koreas)로 살면서도 그것을 '분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과거에 하나였고 미래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양자(兩者)간에는 '국내↔국제', 혹은 '동일문화권↔타문화권'의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인식과 역사, 문화의 결속흐름이 존재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분단과 통합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늘리기 위한 질서가 제안되어야 한다. 이 질서는 논리적으로 정교할수록 통합과 평화에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남북한의 분단체제에 '협동체'의 관점을 더할 때 좀 더 나은 설명을 만나게 되리라 짐작한다. '하나의 사회'란 본질적으로 당대인들이 상호 협력하며, 여기에 선후 세대 간의 '역사상 시간 속에 펼쳐진 협력'이 단방향(시간순)으로 전해 내려오는 상태를 말한다(정치철학자 J. Rawls). 현재의 협력과 역사적 협력 모두 불가항력적이므로 각자 수명만큼 현세를 구성하는 흐름속의 개인들은 당대와 선후 세대 간의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협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간의 분단이란 현재의 협력 구도가 깨진 상태지만, 역사적 협력 즉, 과거에서 현재로 내려오는 단방향 협력(문자, 문화, 사회자본, 독립운동의 혜택 등)은 상당부분 유효하며 미래에는 다시 하나의 협동체를 형성하리라는 의지를 공유하는 상태라고 파악할 수 있다.

B. 현세적 국제관계, 역사적 국내관계

이 현실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데, 남북 간에 현재의 단면, 그러니까 당대가 서로 공정하게 협력하는 구도는 끊어져 각각 별개의 협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타(他)협동체로 파악하여 마치 국제관계와 같이 취급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협력구도는 그것대로 인정하여 국내적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각 사회의 안전은 각자가 담당하여야 하지만, 한글을 필두로 한 문화유산이나 보건의료를 비롯한 생태문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영토문제 등은 마치 하나의 사회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가 기쁘게 헌신하는 대외원조의 경우 남북은 서로 대외원조의 대상이기도 하고, 국내적 부조의 대상이기도 하다.¹⁰⁾ 지금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두 체제가 상호 접근하여 통합에 이르게 된다면 점점 더 국내적 재분배 구도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현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V. 협동체의 ‘통합 → 분리 → 재통합’ 당사자 간의 선교

앞서 협동체 개념으로 설명한 ‘합리적 수준’의 보편적 이론은 이러한 목표를 향하게 하는 출발선으로 교회 밖의 일반인들도 설득할 수 있는 최소치라고 할 수 있다. 교회와 교인들이 이 최소치를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은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더 이상적이고 희생적이며 영웅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 것이다.

우선 그 최소치를 선교 개념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협동체의 통합 → 분리 → 재통합의 여정을 함께 가는 당사자 간의 선교 개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에서는 과거의 책임을 나눠지려는 태도가 ‘역사적 협력구도’에서 도출될 수 있다. 오늘의 적대적 분단과 우리가 보기에 여러 면에서 수준미달(참고자료①)인 북한의 현재 상태는 역사적 협동체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것을 일부 우리(남한)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재통합될 수 있는)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으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 노력은 곧 미래 세대에 대한 당대의 의무이다.

현재라는 단면에서는 엄연히, ‘타(他)공동체’인 현실을 반영하여 각자의 문제를 책임지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도출될 수 있다. 북한의 공인 교회와 교류할 때 느껴지는 국가주의와 포로된 듯한 현실(참고자료①)은 안타깝다. 그러나 이십전십 그것이 한계임을 공감하게 되며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게 된다. 이는 마치 창의적 접근지역 교회들의 연약한 현실을 발견했을 때 마음에 기도제목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와 같다. 공인교회 구성원이 아닌 신자들을 만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유사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적 관점, 즉 하나의 공동체성이 나타나는 시각은 세계인들이나 후세대들 관점을 빌려 올 때 체감하기 쉬울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일정 기간의)남북 교회가 하나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연약함이나 타락상, 너무 오래가는 분단 기간 등을 양자의 공동 책임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세계교회들과의 교제 자리에서 남한 성도들은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은 일반적 현실이다. 대칭적으로 북한의 공인교회 구성원들을 세계 교회들의 교류의 장에 자주 불러내 우리와 같은 질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10) 매우 드문 사례로, 1984년 북한은 남한 수재민들에게 쌀 5만석, 옷감 50만m, 시멘트 10만t, 의약품 등을 지원하였고, 전두환 정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외에는 남→북 방향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타자로서의 존중과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상호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적 사안과 역사적 사안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서 변화하며 흐르고 있는 실체로서의 남북한을 대입하면 질서 있는 구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 교회의 '북한선교'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분화와 통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교이고, 북한의 현재에 대해 책임을 나눠가진 타자(他者)에 의한 선교이며, 미래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후세대들을 위한 선교다. 또한 남한 교회는 자유주의 정체의 시민인 성도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합리성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할 수 있고 이는 남북 관계에 더 나은 질서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람의 왕래를 유발하여 선교의 대문이 열리는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¹⁾

VI. 기존의 구도의 한계와 과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북한이나 공산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교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북한선교' 혹은 '공산권 선교'란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건 신선한 충격이었다. 복음이 종횡무진, 제한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하는 매력적인 요소다.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도전정신과 부채 감은 본받을 만하다.

우리 세대가 그 선배들의 바통을 넘겨받아 달려야 할 텐데, 남북 간에는 아직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어렵고 지지부진하다. 뿐만 아니라 금기와 비밀에 익숙해진 나머지 대문을 열고 나서는 일을 꺼리거나 심지어 문이 열릴까봐 붙잡고 있는 행국이 아닌가 의심되는 장면도 없지 않다. 남북 간 사람의 왕래가 정치권력에 따라 개폐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정치 환경에서,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선히를 공표 하길 서슴지 않았는데, 교회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정권마다 남북 간 사람의 왕래를 줄이고 막았다. 결과적으로 교회에는 북한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길을 틀어막을 정치권력을 선택하라고 과 감히, 불법을 무릅쓰고 선전하는 분들도 있었으며, 때로는 양자가 동일인물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북한주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공개적·공식적 만남에서는 불가능하고, 은밀한·잠입적 선교만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졌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수많은 북한 방문자들은 공식적 경로를 통한 만남도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다. 남북 간 교류가 활발했던 때는 연간 10만 명이 평양을 방문했고(남북은 수백만에 달하는 금강산 관광객은 방북 숫자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속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유독 많았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선교의 기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있는 지역으로 거기에 맞춘 선교 전략의 수립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접촉기회가 정치권력의 의지와 거의 직결돼 있기에 한국의 정치구도를 빼고 선교만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11) 이를 교회론과 선교 이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므로 훌륭한 구성원들의 비판을 기다린다.

A. 정권과 교회의 대북인식

‘분단’을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의 사회협동체가 단절된 것으로 정의한다면 한국 교회는 그것을 막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과로 보자면 교회 스스로도 분단되었다. 물론,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박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했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으며 남한 내에서는 그 목표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상호 소통할 길을 내는 일이다. 이 일은 반드시 정치체제의 ‘통일’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평화의 진전과 함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기간의 대부분에 걸쳐서 한국 교회, 특히 보수 교회는 정권 차원의 대북접근과 동기화 돼 왔지만 유독 화해와 공존 시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거나 상호 불신을 강조하며 그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입장이었다.

[표 1] 정권의 대북관과 한국 보수교회의 대북 인식

정권 차원의 대북관	보수교회의 대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교회 불인정 • ‘지하교회의 독보적 순수성’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복 대상 실지(失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공노선의 교리화 • 피난교회와 노회 • 기독교 도시 평양 회복 • 북한교회 재건(평양 승실의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첩보·공작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삐라(풍선), 잠입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항(귀순)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성도 우대, 강연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없음(화해는 일부 에큐메니칼 교단의 전유물) • ‘위장평화론’에 동조 • ‘속아 넘어가는 남한과 미국’ 우려, 협상 불능·혹은 무능력 가정 • 적극적 반평화 캠페인(카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공존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교회와의 단절론 ?

남한정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불인정’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북한의 공인교회 불인정과 (가상의)지하교회의 독보적 순수성 가정으로 대칭을 이룬다. ‘북진통일 → 멸공통일 → 승공통일 → 국토통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실지(失地)회복적 관점은 ‘피난교회’와 ‘노회’, ‘북한교회 재건’과 짝을 이루며, 최근 등장한

‘평양 송실의 복원’도 이와 상통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필자도 90년대에 ‘북한교회재건운동’에 헌금했었다.¹²⁾ 거의 20년 후에 총신대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그 때와 똑같은 조감도를 가지고 온 분들에게 “그 때 헌금을 어디 쓰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실로 복음을 맞본 성도들에게 ‘북한교회재건’은 가슴이 뛰는 일이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는 거의 격리돼 있었기에 거기서 나오는 개념은 거의 불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적대적 상호관계에서 남북의 정치군사조직들이 서로의 지역을 첩보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교회의 북한선교 방식도 방송, 빠라(풍선)와 같이 비접촉적 침투에서 일부의 북한 내 잠입(潛入), 탈북자 훈련 후 재투입과 같은 은밀한 접촉 전략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으로서는 유명한 주성하 기자(동아일보) 역시 그러한 재투입 훈련을 받았던 체험을 공개했는데, 그는 남한에서 방문한 교회지도자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 훈련장면을 연출하고 나면 얼마간의 돈을 받았다는 것, 실제로 북한에 잠입할 때 위험부담은 온전히 탈북자들의 몫이었다는 씁쓸한 기억을 표현했다.¹³⁾ 투항(귀순)자를 우대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자질을 덜 따지면서 그들을 연단에 세우려는 경향도 닮음 꼴이다.

[표 2]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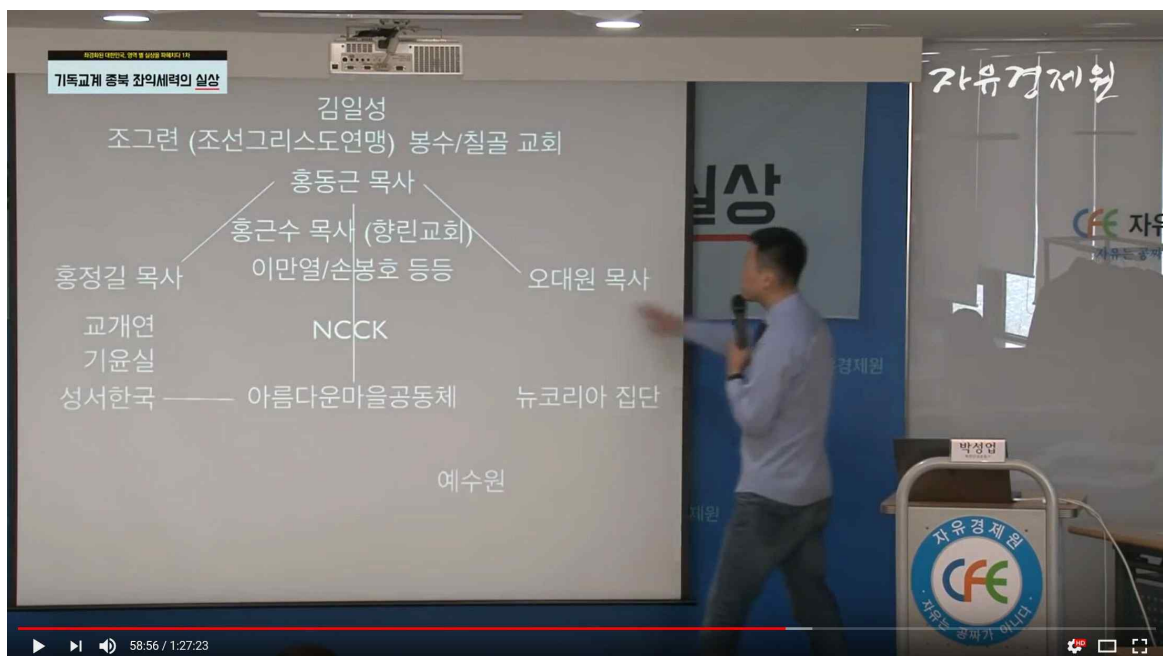
특성 요소		국가연합		연방국가	
		국가연합	구성국	연방국가	구성국
주권보유		×	○	○	×
국제법인격		×	○	○	×
국제책임		×	○	○	×
내치	군사권 및 통화발행권	×	○	○	×
	주민통치권 및 과세권	×	○	△	△
대외적 통치권		△	○	○	×
		제한적 외교권, 군사행동		※조약 체결의 경우 예외 (미국, 독일)	
결합근거		조약(국제법)		연방헌법(국내법)	
존속의 안정성		한시적·잠정적·과도적 결합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결합	
주민의 국적		구성국의 개별국적		연방국가의 단일국적	
구성국간 무력충돌		전쟁		내란	

출처: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p. 56을 바탕으로 보임

12) 중앙일보, ‘개신교계 북한교회 재건운동 활발’, 1996.05.12., <http://news.joins.com/article/3266083>
검색일 2018년 5월 22일

13)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왜 순교의 피는 북한 사람의 몫인가’ 2017.07.20.,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44/3/70040100000144/20170720/85438775/1
검색일 2018년 5월 22일

반면 정권 차원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시기에는 이와 동기화할만한 교회의 입장 혹은 콘텐츠가 없거나 부정적 전망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기독교 이데올로그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거의 심리전에 가까운 반평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1~2년간 그들이 열심히 유포하는 심리전은 국가연합제나 연방제 통일방안이 실상은 ‘공산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연합제는 유럽연합이, 연방제는 미합중국이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버넌스 형태로, 전 세계 어디서나 거대 집단의 통합을 모색할 때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상식에 가까운 것인데, 앞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통합논의들을 골라내 미리 심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교계에서 평화나 화해, 혹은 개혁적 메시지를 가진 인물이나 조직들을 자의적으로 엮어서 없는 조직도를 그려가며 북한과 내통한다느니, 한국 기독교가 북에 넘어갔다느니 하는 부화뇌동을 보여준다. 그들이 그린 ‘조직도’에는 홍정길 목사, 손봉호 교수 등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버젓이 등장한다(그림1). 그렇게 부화뇌동하는 세력은 일부지만, 그들이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일반 성도와 목회자, 전문인, 교회의 원로, 그리고 신학생들이다. 최근 모 신학대에서는 남북문제와 무관한 페미니즘 관련 강좌에 이들의 논리에 사로잡힌 신학도가 이데올로기적 흥분을 드러내며 반대 선전에 열을 올림으로써 그 피해를 드러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지하교회의 독보적 순수성 가정은 북한(공인)교회와의 단절론을 펼 때 그 대체재로 ‘지하교회’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 영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림 3] 유튜브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영상 갈무리, 대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임의 선택하여 북한의 하부조직처럼 그려 유포하고 있다.

B. 화해·평화와 연관된 ‘콘텐츠 없음’의 문제점

창의적 접근지역의 공인교회는 부정(不淨)하고, 지하교회는 순수하다는 가정 자체가 현실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순전히 선교만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한국교회에 ‘먹힌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공식적 관계와 평화 회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버리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권과 교회 밖 다수의 시민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경우, 2018년처럼 거기에 미국과 북한 당국까지 동조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냉전의 섬이 되어 사회와 유리될 위험이 있다. 선한 일로 의지를 지키는 소수는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세속은 물론 성경에서도 명분을 찾기 어려운 자기고립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역교회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러한 현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VII. 권면

먼저, 남북 간 상호존중과 서로를 폄하하지 않는 태도, 비판적 전망을 절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의 출발선이 교회 강단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설교단이든 누군가를 비하(卑下)하는 것은 미학이 성립될 수 없지만 한국 교회가 북한을 비난, 비하하는 일은 흔하다. 그 이유가 현재의 북한을 마귀와 동일시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리라 추정한다.

둘째,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교류의 대상으로 인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보수 교회는 이미 수십 년 이상 교류해 온 조그련을 두고 때때로 “인정할 것인가?” 류의 세미나를 열어 왔다. 그 자체가 무의미한 반복임은 물론 과거의 노력들을 무위로 환원시키는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동·서독 관계에서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신뢰를 얻은 것은 이후 통독 과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셋째, 더 이상 교회가 타락한 정보기관의 공작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안보 과민과 국가주의가 정치공작의 먹잇감으로 보이게 했고 요즘도 일부 세력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반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역량과 선교 역량을 죽일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넷째, 탈북민을 전도하되 그들에게 오늘날의 북한을 알려달라거나(증언자) 통일 이후의 미래를 책임지라는 요구는 지나친 것이다. 탈북 정착민의 대부분이 북한 권력 핵심부와는 거리가 멀거니와 폐쇄 사회에서 자국의 전반적 정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우선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통일 이후를 책임질 만큼 정치적 경험과 상상력을 가질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다. 또한 탈북민 캐리어와 전도를 각 교회의 ‘북한선교부’가 맡으며 대북선교의 일환으로 취급하는데,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무를 털어버리는 기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2018년 들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리자 교회에서는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 불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중에는 성경의 부정적 사례를 북한에 대입한 후 실패를 예측하는 식의 논리도 보인다. 아마도 그런 논리라면 성경 이후 수천 년간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에 상호 감시 속에서는 개선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여섯째, 각 교단과 신학교는 자신들의 교리적 기반이 될만한 평화의 신학을 개발하고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배우지 않고도 지나친 확신을 갖고 말하는 부문이 정치와 남북 관계인데, 명백한 오류로 드러난 것도 많고,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인이 보기에 뒤쳐진 수준이 안타깝다.

일곱째,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성도인 시민은 ‘자유주의’ 정체에 걸맞는 평화수립의 역량(peace building capacity)이 정치권력화 하도록 애써야 한다. 국익(national interest)의 구도는 시민들의 철학에 의해 재편될 수 있으며, 그레이만 제대로 된 자유주의임을 인지하고 현실에 맞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통신, 통행, 통상이 다시 열릴 때 누가 가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되, 북한과 상호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지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양에 도착해서도 북한에 대한 비하심리와 남한 사회의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사를 본 적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방문자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을 반성하고, 자기 체제를 혁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용기가 북한과 북한인들을 대할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① 북한의 공식 교회(조선그리스도교련맹)를 어떻게 볼 것인가¹⁴⁾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 역시 존중하지 않았으며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탄압해 왔다. 이러한 북한 정권 내부에 형성된 종교 조직으로서 조그련이 활성화 되는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을 정권 내부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46년에서 1947년까지 북한의 교회지도자들을 설득·회유하여 여러 목회자들을 가입시켰고 연맹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활동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공산정권에 협력적이던 연맹을 불신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입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도 포기해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반체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전쟁 중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연합군 양측으로부터 희생과 고난을 당했으며 북한 기독교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북한 당국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종교인과 그 가족”을 분류하여 대대적으로 탄압하자, 일부가 저항하였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함경북도 최북단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으로 완전히 붕괴한 기독교공동체에 대해서 북한은 1968년 ‘풀어주는 사업’을 전개하여 60대 이상 ‘노인층 골수신자’들의 가정예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으며, 1967~72년 사이에는 몇몇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72년에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이때에도 1940년대 후반과 유사하게 교인들을 통합하려고 했으며, 사면 이후 가입을 거부하는 종교인들과 갈등을 빚었다. 1972년은 남북 대화가 시작된 해였다. 사면의 이유는 김일성 혁명역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을 도와준 사실이 밝혀지는 등 기독교에 대해 재평가해야 할 사실이 밝혀진 까닭도 있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이들을 가입시키고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지로 추방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 사면이 1980년에도 있었고 이들은 현재 북한 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때의 사면은 김정일이 종교정책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일어났다. 1988년에는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건축되었고 봉수교회는 근처 광복거리의 가정예배처들의 교인들을 흡수함으로써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공간을 넓힐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이라는 세계적 행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칠골교회 신자 출신의 탈북자들에 의하면, 신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신앙생활이 재개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앙에도 발전이 있었다.¹⁵⁾

□ 조그련과의 관계가 갖는 함의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조그련은 분명 정권 내부의 관제 조직이고 외부 세계의 파트너 조직들과 비교하여 자율권이 거의 없는, 종교적으로 허약한 조직이지만 그나마 북한 사회에서는 조그련이 활성화

14) 윤환철, 『한국 기독교기반 대북엔지오의 현황과 발전방안 I』, 2012, pp. 19-20


15) 김병로, ‘북한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pp. 160-177

될 때 교회 건축이 이뤄지며, 종교인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제한적이거나 가정예배도 허용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면 사면이나 가정예배를 허용하는 것 역시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그련은 정권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 필요할 때 활성화 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권의 필요’가 교회를 짓고 신학원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종교정책의 변화로 나타나는가 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종교인들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김일성 혁명역사 등에 등장하는 협조적인 기독교인들을 칭송할 경우 등이며, 외부적으로는 바깥 세계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를 요구받을 때이다. 1988년의 변화는 1980년대 초부터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과 교류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⁶⁾

〈중략〉

한반도 밖에서 남북 기독교자 간의 만남이 있었던 1980년대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노동당의 대변인과 같은 언사로 한국과 해외의 교포들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당시 만남을 가졌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다. 북한 체제 내부에서도 ‘조그련(당시 조기련)’의 존재는 미미했다. 남측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자들과 방북단은 의도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조그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첫 단계는 1991년 권호경 목사가 김일성과 만나는 자리에 조그련 위원장 고기준 목사의 배석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북측은 처음에는 고기준 목사의 동석을 거부했고, 남측은 그가 동석하지 않으면 회담 자체를 갖지 않겠다고 대립한 끝에 북측의 양보를 얻어냈다.¹⁷⁾ 이후 남한 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를 구성하여 대북 지원을 시작했고 북측 파트너인 조그련은 구호물자의 유입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면서 북한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¹⁸⁾

따라서, 비록 온전한 자율성을 갖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북한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종교인 가족들을 지원하면서 기독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그련과 접촉하고, 함께 종교행위와 구호 혹은 개발원조 작업을 하는 등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6) 김병로, 앞의 논문 pp. 172

17) 당시 실무자로 함께 방북한 김영주 목사(전 NCK 총무)의 증언

18) 김병로, 앞의 논문 pp. 157-184

논찬문 1

박문규 (LA기윤실 대표)

#1.

발제자는 평화를 바라는 동시대 기독교인들의 과제가 무엇인가하고 묻고 있다. 그런데 발제자는 서론에서 부터 “반민주, 반평화 세력의 횡방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세력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함에 있어 사랑과 평화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작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첫째 기독교회가 오늘날 담당해야할 가장 큰 과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반민주, 반평화 세력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논문 전체를 통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제자가 평탄할 수 없다고 말한 작업은 과연 무엇일까? 혹 저자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공헌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복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석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 본다. 그러나 이것은 논찬자의 상상력에 의한 짐작이고 발제자가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담당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차적 작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두 번째로 발제자는 민주, 반평화 세력이 있고, 그들은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누구일까? 논찬자의 짐작으로는 (1) '손봉호, 이만열, 오대원, 홍정길' 등 기독교 지도자들 까지 중북세력으로 음해하는 극소수의 극우 분자들 (2) 태극기 집회나 김한식,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정치편향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극우 집회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인사들 (3)한기총 등 보수 연합 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지도자들의 견해에 맹종하는 신자들 (4) 지난 20년간 대선, 총선 등에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혹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표를 던져 주었던 사람들 중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짐작된다.

논찬자의 생각으로는 (1) 에 속하는 자들은 남을 음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니 단호하게 대결해야 할 것이지만 상당수는 보수정부나 관련 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활동한 자로 짐작되기에 그 젖줄이 많이 끊어진 지금은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2)의 세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당분간 지속할 것이지만 우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에 평

화 지향 노선으로 설득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3) 과 (4)에 속하는 무리들은 우선 숫자도 많고 결속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이들을 무시하고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포용하고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이들을 배제 한다면 기독교의 사회와 교회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 아닐까 염려된다.

또 반민주, 반평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쉽지 않다. 만일 한 기독교인이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점령할 까 두렵고,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만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통일은 피를 흘려서라도 막아야 한다” 고 생각 한다면 이 사람을 반평화 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대한민국에는 상당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평화세력, 빈민주세력을 규정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까지 포용하겠다는 것이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이라면 범법을 저지르는 소수의 극우인사를 제외하고는 반공주의자, 보수주의자 들 까지 배제시키지 말고 포용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서야할 자리라고 논찬자는 믿는다.

#3.

발제자는 “안보”와 “번영”을 “평화”와 “번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안보”와 “평화”가 반대 개념인가? “안보”야 말로 “평화”의 필요조건이 아닐까? 과거에 “안보”라는 목표가 독재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안보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안보나 평화나 선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말할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찬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발제자는 미국의 이익 카르텔을 군산복합체에서 여타의 생산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 산업만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의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4.

발제자는 장기 미해결 구조를 말하며 그 정점에 지식의 결핍 다시 말해 북한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과 무지를 구조적 왜곡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발제자의 말대로 보수정권에 의해 구조화되었고 내면화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을 현실악으로 규정해야할 필요성과 국민들의 대북한 혐오증, 북한이 지극히 폐쇄된 사회라는 사실, 한국 사회 특히 기독교의 몰지성주의도 북한에 대한 지식의 결핍에 중요한 원인이었음이 지적되어야 하리라.

#5.

이어서 발제자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도 성취할 수 없다는 생각하는 불능론을 질타하고 있다. 논찬자도 분명히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없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영역은 제한을 받고 있음도 사실이 아닌가? 논찬자는 한국 정부가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결정들, 예컨대 박정희의 월남파병,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 등의 결정들은 대한민국의 집권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 자주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도 함께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6.

다음에 발제자는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은 것을 속단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빨리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좋지만 혹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 논찬자의 생각이다.

#7.

발제자는 현실주의 정치학의 경향과 피터 차(Peter Cha) 등이 “북한은 안 변했고 안 변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비판한다. 논찬자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은 세 세상이 되었다느니 김정일은 근본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른 멘탈리티를 가졌다고 쉽게 속단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발제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 앞에서 어느 점이 변했고 어느 점이 변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의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 현실주의 역시 국제 정치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사고의 틀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한 국가의 힘은 다른 힘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고 견제되지 않은 힘은 평화를 해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 그렇게 많이 비판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8.


논찬자가 발제자의 발제문 가운데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협동체적인 남북의 미래상이다. 그리고 현재 보수주의 기독교가 연방제나 국가연합의 주장이 남한을 북한에 갖다가 바치는 것이라 언설들은 그 통일 방안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어프로치에서 나온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와 과잉 공포에서 나

온 것이다. 이점에 논찬자는 발제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아쉬운 것은 남북 두개의 공동체를 협동체적인 공동체로 조명하는 시각의 내용(콘텐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9.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곧 이어서 발제자가 한국교회의 콘텐츠 없음을 꾸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의 콘텐츠가 없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남북 통일 방안의 콘텐츠인가 아니면 북한 선교의 콘텐츠인가? 두 개 다 인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에 기독교회가 묵묵히 매진하여야 하리라.

#10.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발제자는 공인 교회와 접촉할 것을 권하고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일할 것을 권한다. 논찬자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 공인교회와 상대하지 않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지원 하는 분들의 입장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삼자 교회는 삼자 교회대로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대로 역할을 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무리하게 방북했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의 구명 운동 역시 한국교회가 진보 나 복수냐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논찬문 2

조주현 (LA기윤실 사무국장)

들어가며

윤환철 사무총장의 발제문은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을 경험과 사회분석, 그리고 기독교의 신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기독교가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들어있는 연구이다.

한반도 평화는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민족, 그리고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모든 것이 포함된 총체적 영역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때 ‘기독교인인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기 절적인 질문임에는 틀림없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윤환철 사무총장의 논문을 읽으며,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하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넘어 범세계적인 이슈이며, 한반도의 문제가 자칫 세계 패권 경쟁에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을 잘 인식한 글임에 틀림없다.

한반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졌는데, 문제는 단순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적대적 대치(전쟁)의 상황이다. 이 적대적 상황은 남북의 민족적 단일성마저 이질적으로 만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때 기독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매우 설득력 있는 발제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문제의 접근에 매우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한 글임에 틀림없음을 밝히며, 몇 가지 토론을 하고자 한다.

총평

1. 발제문의 전반에 들어있는 한반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려는 노력을 찾을 수 있었다. 전반적인 구성은 논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앙적이고 경험적이지만 결코 논리를 잃지 않고 매끄럽게 결론을 도출하는 좋은 글이라고 사료된다.

2.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끝이 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술하며, 신앙인의 눈높이를 잊지 않고, 전문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어가는 과감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3. 그러나 남한의 좌우 대립에서 보수 우파의 논리를 좀 더 객관적인 사료와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단순한 휘방꾼이라고 보는 것은 그들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너무 폄훼하는 것으로 보여, 자칫 좋은 글이 편향적이라는 말을 들을 여지를 남긴 점에 아쉬움이 있다.

4. 남북문제의 장기 미해결의 구조를 도식화한 정리는 일목요연하게 현시대의 남북 관계의 어려움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도표로서 매우 탁월한 안목이라고 말하고 싶다.

부분적 논평

1. 기독교의 화해를 생각하며

한반도의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과 노력이 있었지만, 서로의 불신의 장벽을 넘기에는 매우 어려웠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넘기 위한 작업은 기독교가 이상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발제자의 주장도 기독교는 평화와 화해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즉 ‘원수를 죽기 까지 사랑’, ‘더불어 화목’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대 북한 접근에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는 발제자의 지적대로 사랑보다는 적대적 긴장을 가진 세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의 원리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마귀의 세력 혹은 악마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기독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은 악마와는 절대 대화와 타협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들과는 대비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아야 하며, 북한 교회 또한 비록 힘은 없지만 우리가 소통해야 할 형제로 보는 주장도 있다.

남한 내 팽팽한 이 두 주장은 대 북한 접촉도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혼란스럽다. 자칫 북한과 “사랑, 화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작 남한 내 “미움, 싸움”이 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을 품기 위하여 남한의 대립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문제점을 발제자에게 묻고 싶다. 남북의 대립과 더불어 있는 좌우의 극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좌가 우의 의견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접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의 대화가 가능한가?

남한의 교회가 대 북한 교회와 대화를 한다면, 과연 어떤 교회(교단, 단체)가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표성을 가진 남한의 교회(교단, 단체)가 선정된다면, 과연 북한의 교회는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평화를 위한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북한의 몇몇 교회 관계자들을 만남으로 북한 기독교, 교인 혹은 주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가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남한 교회가 종교적 접근을 하더라도, 그들은 정치적 접근을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봉수 교회나 칠곡 교회의 관계자들(조그런)과의 만남이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북한 교회의 대표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만남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분단체에서 협동체로

분단체에서 협동체로의 가는데 기독교가 역할을 감당하자는 내용은 매우 탁월한 단어를 선택했다고 본다. 결국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가 아닌, 스포츠, 문화 등의 교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발제자의 주장처럼 남북의 기독교가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로 김일성 자서전에 나오는 손정도 목사의 생애를 연구한다거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진다거나 등의 공동의 목표도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방향은 결국 교회의 협력을 넘어 사회 대중에게도 파급력을 미치는 일일 수 있다.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4. 남북을 넘어 미국도 얽혀있는 한반도

한반도는 남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학 혁명(1894)이 부패와 외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100년이 넘게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 나라가 자국의 보호를 위하여 타국의 군대를 주둔 시키는 것도 모순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모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보다 북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소위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발제문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남북미로 자연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 문제가 남북미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왜 북미의 문제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이 없는 듯하다.

또한 주한 미군의 문제도 다루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권국에서 타국의 군대가 주둔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자신의 국방을 타국의 군대에 의존한다는 것은 동맹국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발제문의 내용을 따라 살펴보면, 분단체에서 협동체로 협동체에서 통일체(재통합)로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자인 듯 당사자인 듯한, 미국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기독교는 미국을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인가의 답도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선교를 통하여 기독교를 전해준 고마운 이웃 정도로 보기에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다. 한국의 남북 전쟁에서 남한은 미국에 군사 원조를 받았고(군사원조는 미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것이었다.), 전쟁 후의 상황에는 경제의 원조를 받았으며, 남북의 대치에서 힘의 우위를 통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우군이였다.

단순히 3자 혹은 3국으로 말하기에는 이미 많은 일을 겪은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남한에게는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북한에게는 원수, 승냥이 등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결코 쉽게 다룰 수 없는 미국, 기독교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가 발제문에서 생략된 듯하다.

나가며

서울-LA 기운실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본다. 특히 안과 밖에서 보는 한반도의 형편을 통하여 보다 긍정적인 기독교의 평화와 통일의 운동을 전개할 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적이며 경제적 접근의 통일 운동이 아니며, 또한 비상식적이며 부도덕적인 형태의 통일 운동이 아니라, 매우 신앙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싶다.

비록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망에 분명 응답할 실 것을 믿으며, 비록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하여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한반도에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